

전주한옥마을 발전 위해 정체성 찾아야

관광실태 개선 대토론회 “급격한 상업화로 위기상황”... “업종별 니즈 부합하는 경영전략 재구축 필요”

전주시 한옥마을이 ‘지속적 운동성’ 내지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린 ‘전주한옥마을 관광실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광수(국민의당, 전북 전주갑) 의원과 정운현(새누리당, 전주을) 의원, 정동영(국민의당, 전주병) 의원 등 전주권 국회의원 3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언론, 정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15 전주한옥마을 상업시설 조사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진명숙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연구원은 “한옥마을 내 상업시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상점들이 들어서는 소위 ‘쪼개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좁은 공간에 상업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한옥마을의 미관, 경관 등의 물리적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업시설은 2001년 식음료 12개, 판매 11개, 편의시설 14개에서 2015년 현재 숙박 76개, 식음료 62개, 판매 41개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옥마을 상업화에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문경 전주대 교수는 “한옥마을의 지속



전주한옥마을을 관광실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가 7일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김광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장단기 경영전략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한옥마을은 행정력보다는 업종별 니즈에 부합하는 상업공간 운영 전문가의 컨설팅과 이에 따른 경영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한옥마을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명숙 도시연구 연구소 이사장은 “전통문화적 한옥마을을 조성 후 후대 앞, 종로 3가 등과 동등한 지가급등으로 마을 인구

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동네가 뜨면서 밀려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 이주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백영규 “전주시 자전거 정책 기본도 원칙도 없다” 비판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은 기본도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을 통렬히 비판했다.

백영규 시의원(안산·중화산 1.2등)은 7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을 집중 홍보하고 있지만, 예산 대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따르면 전주시는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뒤로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주시역 도로 총 연장 373km 중 자전거도로는 20km로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도 2.31%에 머물고 있다.

백 의원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정책에 대한 초라한 성적표,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의 현실”이라며 “자전거도로 확대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이경신 의원 “한옥마을 등 민간 주도형 문화콘텐츠시대 열어야”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에 민간주도형 문화 콘텐츠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경신 시의원은 7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화관광산업 육성은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민간주도형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나 문화관광 콘텐츠의 대부분은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적일 때 그 생명력과 성공이 보장된다”며 “남부시장 청년들의 성공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사업이 전주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박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 개헌 추진하라”

박지원 “경험 공유, 쌀 · 감귤 지원도... 개헌, 협치 청사진 그리는 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7일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개헌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또 “지난 5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 당시 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정부의 제재 · 압박 위주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그것(정상회담 추진)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쥔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감사를 보낼 것”이라며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는 아울러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대북지원 재개도 공식 요청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은 못할망정 쌀을 퍼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 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느냐”고 꼬집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쌀과 감귤이 핵무기 개발이 되는 않는다”며 “대북 쌀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3조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추미애 “중 · 러 등 돌리게 한사드, 외교적 패착”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실력 시켜야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외교적으로도 하지 않아야 할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와 면담을 갖고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의 가장 기본은 국민통합이야 한다. 안보에 여야가 없고 위아래도 없

다”며 “분열을 부추기고 선택을 강요하는 안보가 돼선 결코 안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드”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국민의견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뺏았다.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외부인 운운하며 이념적으로 분열시킨다”며 “구체적 계획 없이 무조건 2017년 연말까지 배치하겠다고만 하니 국민 입장에서 기가킬 노릇”이라 꼬집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안보,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안보

는 잘못된 무능한 안보”라며 “정부 여당은 더민주가 제안한 민생안보로 방향을 선회해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철현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면서 국민에 대한 일방적 통보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더민주가 하루 속히 사드 철회 문제를 당론으로 정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투쟁위 한 관계자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게끔 하는 투쟁과 운동에 더민주가 힘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미 · 중 · 러 · 일 간 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청와대 국감 10월21일 열려 우병우 수석도 증인 포함

20대 국회 첫 청와대 국감장사가 내달 21일 열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감을 10월21일 실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또 이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정수석은 그간 관행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우 수석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관 증인 증인은 민정수석도 채택돼 있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관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 만큼은 현안이 된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 할 것이므로 우병우 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증인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청하지”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인의 증인, 참고인 채택은 3당 간 사안에 협의해 추후 확정하는 것이 어떤 지 위원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사전행발언을 들은 뒤 “증인 채택의 건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관 증인은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일반증인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간 추후 협의로 위임해달라”고 우 수석의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뉴스1

더민주 도당, 추석 맞아 민생탐방 나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일 오전10시30분부터 전북 곳곳을 찾아 민생탐방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김춘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은덕 전주갑 지역위원장,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명지 전주시시장, 안명수 사무처장, 도의원 및 시의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전10시30분 전주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반봉현 상인회장을 비롯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 직후에는 상가를 돌며 미리 준비한 농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고,전통시장 애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전주성에전문요양원과 김제한울양로원 등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입소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도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며 “민생현장에서 추석민심을 청취하고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의원 윤리 ·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촉

전북도의회는 7일 제2기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 ·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촉 위촉식’을 가졌다.

전북도의회의원 윤리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도의원의 윤리 ·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이다. 도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 위원장은 “의정의 윤리 · 행동강령 실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노동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정읍2 ·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농촌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 운영하는 것으로 각종 센터에서 진행한 농어촌 리더양성 교육, 홍보 등 유사 또는 중복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운영비 등 약 8,8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항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되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 귀농귀촌 · 농촌유학 · 농어촌관광 등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민간 법인 등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위탁 ·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새로운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센터가 하나씩 생기는 양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센터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며 “도의회와 전북도가 머리를 맞대 협의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농어업인들이 삶의 향상을 꾀하고 농어촌 공동체가 강화되어 농어인들이 더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환복위, 군산폐자원에너지화시설 부지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7일 군산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대상 부지를 찾아 점검했다.

이날 최훈열 위원장과 정호운 · 이성일 · 국주영은 · 김영배 · 박재만 · 이호근 위원은 국민산업, 엔아이티, 한솔이엘이 등 군산 폐기물처리업체 3곳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특히, 위원들은 폐기를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침출수 및 매립가스 처리시설 등 시설물의 인정 기준과 최적의 환경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대상 부지를 찾아 시설계획, 사업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순환매립시설 등의 추진에 철저한 준비와 인근지역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

순직보다 자살이 더 많은 경찰... ‘우울증’ 최다

최근 5년 간 순직하는 경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자살한 경찰은 93명으로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 69명보다 35% 가량 많았다.

자살한 경찰의 사망원인으로는 ‘우울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불화(23명), 신병비관(13명), 경제문제 · 질병비관(각 10명), 직장문제(7명), 이성문제 · 원인불명(각 3명) 등이 뒤따랐다.

순직한 경찰 중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68%(47명)로 최다였다. 이어 교통사고(16명), 안전사고(4명), 범인피습(2명)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1